

KCM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2011. 12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hjnoh@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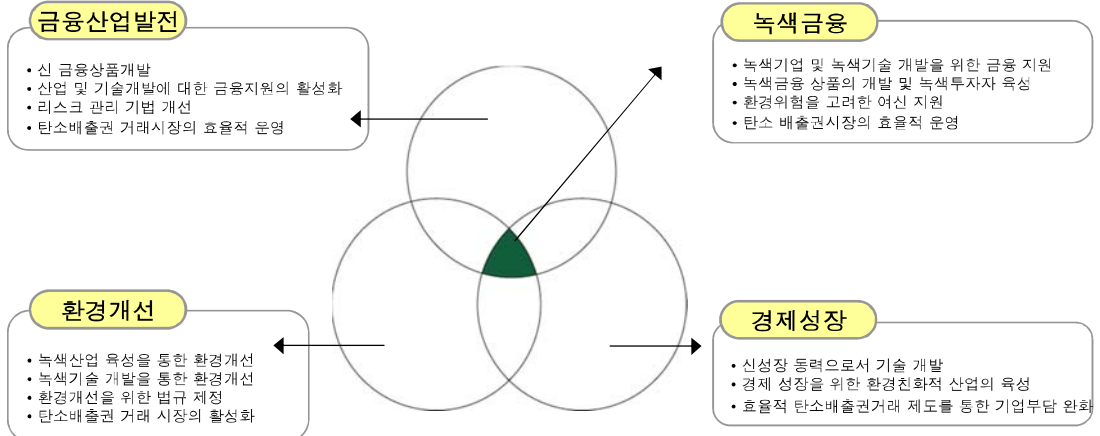
-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의 개념

■ 녹색금융

-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



2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 신재생에너지 증가분만큼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에너지를 대체 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장기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단계에 따른 체계적 금융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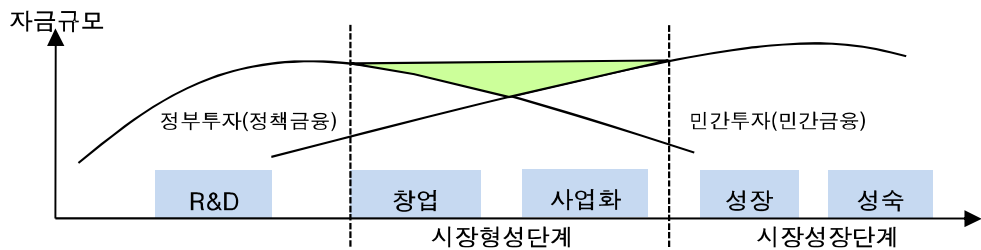
3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2. 녹색금융 지원체계

■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민간금융의 지원체계 확립

-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녹색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하며 금융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기능 필요
 - 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원 투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금의 시장 원리에 따른 지원 체계 필요
 - 성장가능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녹색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및 녹색금융상품의 다양성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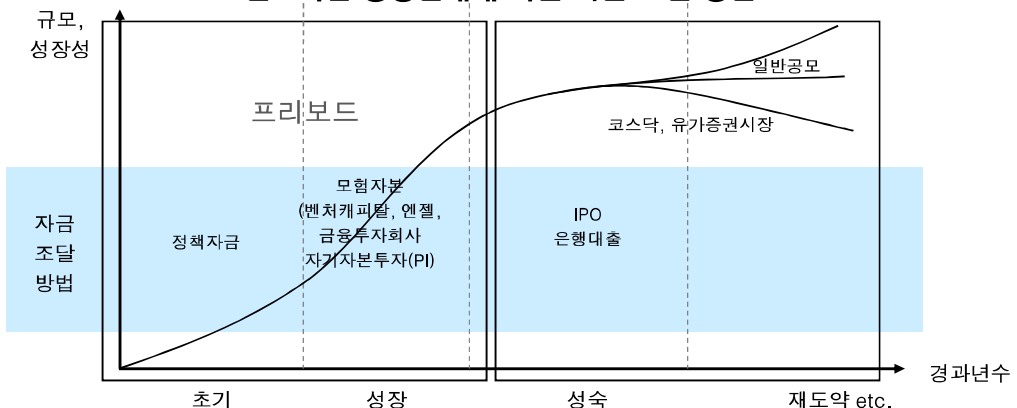
4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녹색산업의 발전과 녹색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 활성화

-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사업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의 벤처(venture) 사업 특성을 지님
 - 초기 녹색산업은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 (debt-financing)보다 모험자본의 역할 필요
 - 성장-성숙 단계로 발전시 자본시장을 통한 IPO, 주식발행 등 적극적 자금 조달 가능

<그림>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5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단계에 따른 체계적 금융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초기 R&D투자: 정책자금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 모험자본
- 성장내지 성숙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자본시장 및 은행을 통한 지원

6

목차

-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7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1. 녹색금융 국내 현황

가. 제도 현황

■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

- 금융회사가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개인)에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비과세
 - 소득세 면제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그 만큼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전문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
- 2011년 5월말 기준 비과세 녹색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전무함

<표> 비과세 녹색상품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10%, 300만원)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8

자료: 기획재정부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녹색인증제도

- 2010년 4월 14일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관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됨
 - 녹색인증제 시행을 통해 녹색기술, 녹색기업 등 투자적격 대상을 제시
- 2011년 5월 녹색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통하여 운영 요령 개정
 - 금융권 여신심사항목으로 대체할수 있는 시장성 평가(성장률, 수익률 등)를 삭제하고 기술성·녹색성 배점 확대
- 2011년 8월말 기준 42개 녹색전문기업, 11건 녹색사업 등이 인증

<표> 녹색인증 현황

인증구분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실적 (2011년 8월말)	381건	11건	42개 업체

자료: KIBO

9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지원 현황

1) 정책자금

■ 정책대출

- 산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기관이 중심이 되어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 사업) 대출, 녹색인증기술, 사업 기업 대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자자금 대출 시행
 - 2011년 5월 말 기준 총 11종의 정책대출 상품이 있음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대출
 - 2011년 1사분기 기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금리 우대(최대 0.5%)를 띄고 있음

<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대출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32,352	60,075	15,079

주: 지원실적은 당해년도 중 공급규모이며, 잔액은 아님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단위: 억원)

10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정책펀드

- 녹색정책펀드는 정부(공공기관)가 민간투자자와 함께 출자하여 결성한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 정부(공공기관)는 녹색펀드에 주도적으로 출자하여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확충
- 2011년 3월 기준 총 4조 6천억원의 정책펀드 조성
 - 투자집행률은 12.2%~29.0% 수준이며, 투자대상 기업 발굴 단계로 미활성화

<표> 주요 정책자금별 특징 및 지원 현황

정책자금	주무부처	투자대상 및 특징	조성액 (억원)	투자액 (억원)	집행률 (금액기준, %)
신성장동력펀드	지식경제부	신성장분야 기업 대규모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8,701	2,180	25.1%
모태펀드 내 신성장동력 자펀드	중소기업청	창업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6,481	1,261	19.5%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	30,736	3,759	12.2%
녹색산업투자회사	정책금융공사	녹색인증사업,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500	145	29.0%

11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2) 예금/적금, 카드 및 보험

■ 녹색 예금/적금, 카드 및 보험

- 다수의 민간금융기관이 녹색기업 육성과 녹색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 예·적금, 녹색카드 및 녹색보험을 제공

구분	참여기관	상품수	내용
녹색 예·적금	14개 민간 은행	2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예금/저축 가입할동시 녹색기업의 자금 지원과 국가 녹색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캠페인,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 종이서류 또는 통장발행 생략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 • 금리우대(최대 1.1% 차감), 각종 수수료 면제, 자전거 보험 무상 가입 등의 혜택
녹색대출	14개 은행	2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산업, 녹색인증기술/사업·기업,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자금 등 친환경 제품 제조기업 등에 대해 대출한도나 대출금리 등 기존 대출에 비하여 우대 •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하여 대출한도 상향(최대 100%), 대출금리 우대(최대 0.5%차감) 등의 혜택이 있음 •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LED, CNG 버스 등 녹색시설 설치 및 제품 구입에 관련된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 그린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 형태

12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구분	참여기관	상품수	내용
녹색 카드	11개 은행 및 카드사	2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활, 녹색기부, 녹색소비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객의 소비활동을 통해 녹색기술과 제품의 지원, 녹색기업의 성장촉진 등을 유도 • 친환경활동에 대한 할인, 기부, 마일리지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카드 사용시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소비, 자전거 구매, 에너지 절감에 할인 또는 마일리지 적립 가능 - 사용실적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적립된 마일리지를 녹색 성장 관련 공익사업 및 환경 단체에 기부 • 혜택: 친환경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최대 10%), 이용 실적에 따른 기부금 적립(최대 0.2%) 등
녹색보험	13개 보험사	2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가 자전거이용, 전자약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녹색생활에 관심이 높은 고객에 제공 • 고객(피보험자)은 자전거보험, 승용차요일제 특약, 이메일을 통한 보험관련 서류 수령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 • 기존 보험 대비 자전거사고보장(사망시 최대 1억 5천만원),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확대(최대 8.7%) 등의 혜택

주: 2011년 5월말 기준
자료: www.green-finance.or.kr

13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그러나 실질적 녹색금융 활성화 자금의 유출입 통로로 활용되지 못함
 - 국내 녹색여신의 경우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2조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한 수준임

<표> 은행권 녹색기업 여신 잔액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9월말	2009년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국책은행	27,754	33,198	53,652	70,163
민간은행	15,368	17,493	22,533	22,240
민간은행 비중	36%	35%	30%	24%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3) 자본시장

■ 녹색펀드

- 투자전문기관이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간접투자방식의 금융상품
 - 2011년 5월말 현재 녹색금융 포털 사이트(www.green-finance.or.kr)에 26개 기관 41종 상품 정보 수록
- 2011년 5월말 기준 녹색펀드(국내 투자, 공모형)는 총 114종으로 순자산액은 3,636억원 수준임
 - 전체 국내투자형 공모펀드 시장 대비 비중은 0.3%에 불과함

	펀드수(개)	순자산액(억원)
국내공모펀드	1,829	1,276,292
녹색펀드	114	3,636
녹색펀드 비중	6.2%	0.3%

주: 집합투자분류코드 중 녹색성장만 구분되는 코드가 없어, 펀드명 중 "녹색", "그린", "재생" 등 연관성 있는 단어들 포함
펀드만으로 산출
자료: 펀드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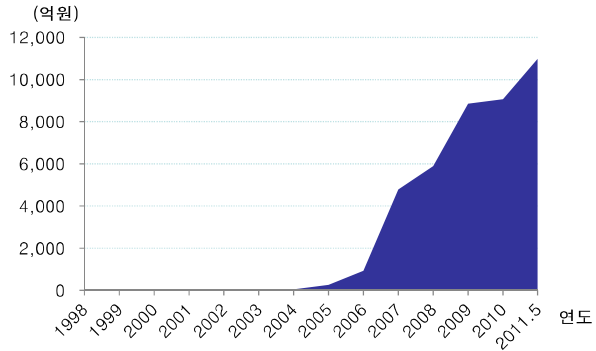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5월말 기준 전체 녹색관련 펀드(국내외 투자, 공사모포함) 는 총 233종, 설정액은 1조 983억원 수준임

<표> 녹색관련 펀드 신규 설정 추이

연도	설정 펀드수	설정액(억원)	순자산(억원)
1998	1	3.22	3.26
1999	5	43.60	48.28
2000	-	-	-
2001	-	-	-
2002	-	-	-
2003	-	-	-
2004	-	-	-
2005	1	205.59	232.82
2006	22	674.33	777.73
2007	46	3,859.60	3,379.17
2008	36	1,094.35	1,224.07
2009	94	2,969.13	3,154.13
2010	20	220.54	230.54
2011.5	8	1,912.82	1,942.15

<그림> 녹색관련 펀드 누적설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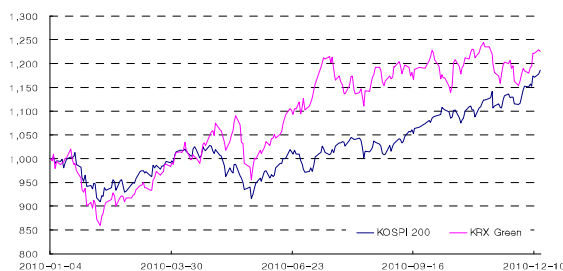
주: 1) 집합투자분류코드 중 녹색성장만 구분되는 코드가 없어, 펀드명 중 "녹색", "그린", "재생" 등 연관성 있는 단어들 포함 펀드만으로 산출
 2) 2011년 5월 말 기준
 자료: 펀드닥터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녹색산업지수 (KRX Green)

- 정부로부터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 녹색사업)을 취득한 기업 등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
 - 한국거래소(KRX)가 2010년 12월 20일(월)부터 산출·발표
 - 2011년 5월말 기준 녹색인증기업 17사(녹색전문 3사, 녹색기술인증 14사), 비인증기업 3사로 구성
- 2010년 1월 4일~동년 12월 14일 사이 녹색산업지수는 KOSPI200 대비 초과수익 시현
 - 녹색산업지수: 수익률 22.7%, 변동성 20.74%
 - 코스피200: 수익률 18.6%, 변동성 15.92

<그림> 녹색산업지수 추이(2010.1.4~12.14)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4) 보증

■ 정책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기업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의무 이행을 보장
 - 녹색기업(보증계약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보증기관이 피보험자(구매자, 발주처 등)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가 있음
 - 정책보증을 통하여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관	내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절약(ESCO) 등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주역할로 함 • 기술보증기금: 녹색기술에 대한 보증 • 수출입은행: 수출과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이행성을 보장 •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은 일반 정책보증에 비하여 보증한도 상향,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차감, 대표자 등의 연대 보증 입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받음

주: 2011년 5월말 기준
자료: www.green-finance.or.kr

18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녹색보증 및 보험 현황

- 녹색성장산업을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지원(2010년 7월)
- 보증료 감면(최대 0.5%), 보증한도 확대(30억→70억) 및 보증비율 확대(85%이내 → 90% 부분보증)

<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보증·보험 실적

(단위: 억원)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보증	신용보증기금	26,240	36,118	10,432
	기술보증기금	16,621	18,201	5,662
보험	무역보험공사	7,441	41,416	14,420
합계		50,302	95,735	30,514

주: 지원실적은 당해년도 중 공급규모이며, 잔액은 아님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19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BAU 대비 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

-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및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 2011년 4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확정
 - 2015년부터 총량배출권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탄소배출 감축실적과 연계 강화 방안 고려

-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디자인 필요

20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2. 녹색금융의 문제점

가. 지원 제도상의 문제점

■ 세제지원 제도의 역할 미흡

- 녹색인증제를 통한 세제 지원 대상 부족
 - 녹색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이 28사(2011년 4월 25일 기준)에 불과하여 세제 지원 녹색금융상품 출시가 지연됨
- 녹색인증제와 연계한 녹색예금·채권 상품 전무함
 - 특히, 60% 이상 녹색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녹색인증제와 연계된 녹색예금·채권 상품의 출시가 어려움

21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나. 금융기관 지원 체계의 문제점

■ 녹색금융상품의 자금 유입과 공급간 선순환 구조 미확립

-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 녹색프로젝트와 녹색기업에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임
 - 은행의 경우 담보 및 보증 필요하고 녹색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분석 기능 미흡으로 여신 위주의 단순 상품을 녹색금융에 의한 포장으로 출시하고 있음
 - 녹색예적금의 경우 일반 예적금 상품과 비교시 에너지 절약 서약서 작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자전거 이용, 환경단체 가입 회원 등에 한하여 우대금리 0.1%~0.4% 제공함
 - 은행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높여야 함
-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지원 후 지원 금융의 회수책이 미비한 실정임
 - 2011년 3월 신성장분야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를 위한 코스닥 상장 특례 도입하여 자본시장 진입 요건 완화하였으나, 시행 초기 단계임

<표>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 특례 요건**

요건	설립년수	자기자본	경상이익	이익규모, 매출액, 시가총액(택일)
일반기업	3년이상	30억원 이상	적용	① ROE 10%, ② 당기순이익 20억, ③ 매출액 100억 & 시가총액 300억
벤처기업	면제	15억원 이상	적용	① ROE 5%, ② 당기순이익 10억, ③ 매출액 50억 & 시가총액 300억
차세대성장동력	면제	15억원 이상	면제	면제

22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다. 녹색금융상품의 기준 불명확

■ 금융권의 일관된 기준 부재

- 녹색금융상품과 관련되어 '녹색'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함
 - 에코(Eco), SRI, 그린, 저탄소,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클린·대체에너지, 친환경, 신성장동력 등의 용어를 사용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여 녹색금융상품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 금융투자업 관련 상품의 경우 녹색펀드와 일반 뮤추얼펀드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단순한 금융기관의 홍보효과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될 우려 존재

분야	녹색 관련 금융상품 (예시)
은행	초록세상적금, 그린스타트적금, 갈맷길적금, KB WiseGreen e-공동구매정기예금, 자전거정기예금 등
카드	Style-eco카드, 트랜스폼 카드, 리필 Gift 카드, 세계자연유산 I♥Jeju 카드, 에코마일리지 신용카드 등
금융투자업	대한민국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 미래녹색성장증권투자, 그린SRI증권투자주식, 지구 온난화 테마 증권 투자신탁 등

23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라. 인프라 구축 미흡

■ 제도적 인프라 미비

- 녹색금융지원 제도, 기업의 환경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체계, 환경에 대한 대부자 책임 관련 규율 미비

■ 기술적 인프라 미비

- 환경관련 DB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녹색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 미확립
-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 녹색금융 포털 사이트가 최근 구축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 인적 인프라 미비

- 환경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 금융 소비자들의 녹색금융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임

24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마. 녹색금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의 확신 부족

■ 녹색경쟁력지수 저하 요인으로 정책일관성 미흡 제기

- 한국의 녹색경쟁력지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정책일관성, 환경정책 효율성, 환경기술혁신 등이 미흡함

<표> 주요국 녹색경쟁력 지수

구분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중국	OECD
녹색 경쟁력 지수	112.8 (1)	111.1 (2)	109.6 (3)	109.0 (4)	103.2 (7)	97.4 (11)	81.9 (14)	104.3
低탄소화 지수	114.0 (1)	110.3 (2)	105.2 (6)	108.3 (3)	101.4 (9)	88.2 (13)	81.1 (15)	104.3
녹색 산업화 지수	110.9 (1)	110.4 (3)	110.8 (2)	108.5 (4)	103.8 (7)	102.3 (8)	84.1 (14)	103.8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25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지연

-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 수정
-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지연 및 부담 가중 우려
 - 2020년까지 BAU 기준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장기간 감축 노력을 해야됨
 - 단, 목표관리제는 2012년부터 시행
- 선점효과가 중요한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지연시 국제적으로 중장기적 경쟁력 약화 우려
 - 일본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2008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 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 중인 상태임
 - 우리나라 거래제 대상기업이 최대 470여개(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거래제는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6

목차

- I. 녹색금융의 개념과 지원체계
- II.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27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1. 자본시장의 적극 활용

가. 자본시장에서의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 녹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의 허용

-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된 국내 헤지펀드를 이용하여 녹색산업에 실질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헤지펀드의 운용상의 제약과 설립 용이성 확보 및 펀드 운용자 요건 완화를 통해 녹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 허용 필요
 -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녹색중소기업 채권투자전문 헤지펀드’ 추진

28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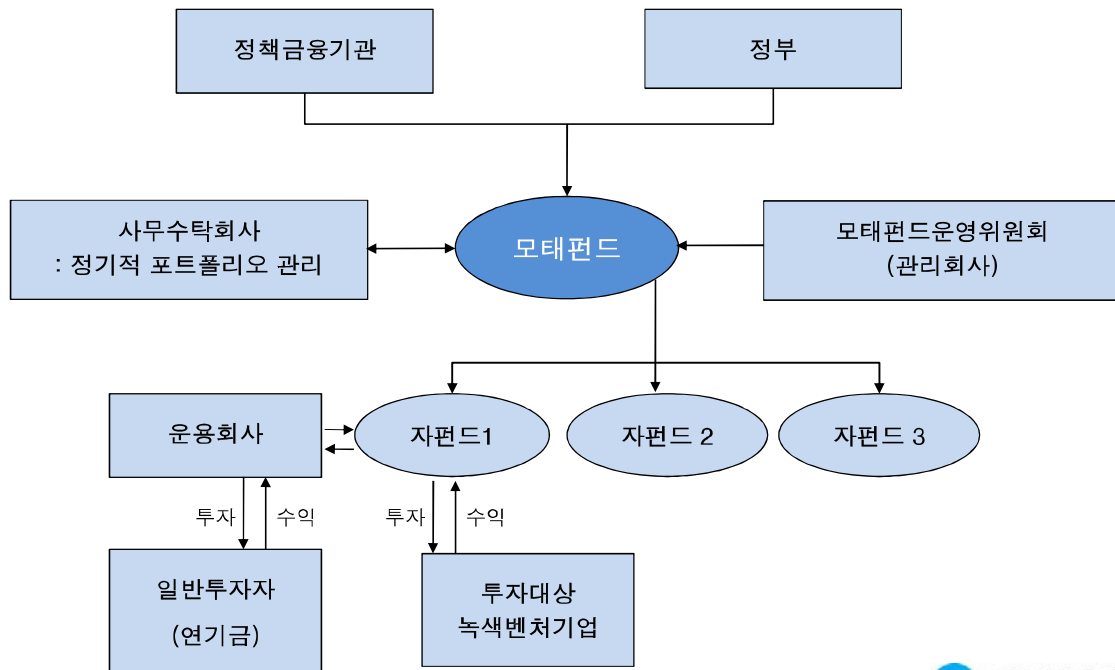
■ 녹색기업 대상 정부지원 모태펀드 설정

- 재정지원 방식의 녹색기업 지원 모태펀드 조성
 - 사업 초기 시설투자 및 서비스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을 위해 녹색기업 지원 모태펀드(Fund of Fund) 조성
 -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모펀드)로 결성하고, 모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출자방식
 - 초기자금(seed money) → 모태펀드 → 자(子)펀드(투자조합 등) → 녹색기업에 투자
 - 주요 투자자
 - 정책금융기관, 정부
 - 녹색펀드 구성시 자금의 일부를 공적 연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 필요시 민간투자자에게 수익 우선 배분 고려

29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그림> 녹색기업 모태펀드의 운용구조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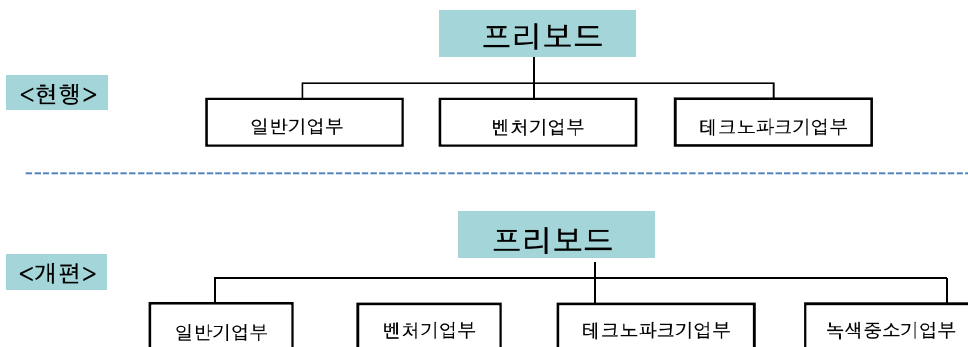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나.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위한 거래 시장의 창출

■ 프리보드 시장의 활용

- 소속부 제도 개편

- 현행 3개 소속부를 4개 소속부로 개편
-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기업 중심시장이라는 정체성 형성
- 장외주식거래와 공익 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기능 수행



31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프리보드 시장을 거래소 시장을 보완하는 자본시장으로 육성
 - 기업의 성장단계, 특성 등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어려운 기업 및 주주에게 자본시장 활용 기회 제공
 -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녹색인증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정책지원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기업 성장 기회 제공
- 프리보드 시장 투자자 육성을 위한 프리보드 펀드의 조성
 - 프리보드 녹색신성장동력 펀드
 - 2009년 8월 중기청 모태펀드 180억원, 금투협 120억원 등이 출자하여 650억원 결성
 - 20~30개사 녹색신성장동력기업에 투자한 후 IPO 등을 통한 프리보드 성공 사례 시현 추진
 - BI(Business Incubator)-프리보드 전용 펀드 조성(100억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프리보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목적 펀드인 BI 프리보드 전용
- 중소녹색벤처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
 - 금융컨설팅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실질적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컨설팅회사가 프리보드 지정주선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적 지원
 - 금융컨설팅사 등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모집·매출 주선업 영위 가능
 - 일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IPO 전문 증권회사가 특화서비스 제공, 신시장 및 장외시장 (Greensheet) 상장 자문 및 모집·매출 주선업 담당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2. 인프라 구축

■ 제도적 인프라 구축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주요 법·제도에 환경 요건 반영

- 금융기관의 대부자 및 수탁자 책무 등에 환경고려 의무화
- 신용평가 및 회계 제도상에 환경요건 반영

기업의 녹색 정보공개 촉진

- 상장 및 기업공시 요건에 녹색경영정보 반영
- 자발적 정보공개 유도에서 정보공개 의무화로 단계적 접근
 -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법적 요건 이외에도 GRI가이드라인 등 자발적인 가이드에 따른 포괄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녹색기술, 기업, 산업에 대한 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여신 및 투자대상 가이드 제공

- 산업 및 기술 분야 및 형태별, 사업규모별 녹색기업 인증제도 확산
 - 골드만 삭스 등 선진금융기관들은 특정 산업내에서의 녹색선도 기업 또는 비녹색기업을 선별하는 식으로 기업의 녹색평가를 수행함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기술적 인프라 구축

녹색지수(Green Index) 개발

- 녹색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지수 개발
- 녹색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탄소)위험반영지수 개발
 - JPMorgan은 Innovest사와 공동으로 세계최초 기업의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채권지수인 JENI Carbon Beta Index 개발

녹색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녹색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환경부 등 정부의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규제 준수, 녹색기업지정 자발적 협약 등 각종 정보를 여신, 투자분석 지원을 위해 제공
- 녹색금융상품 정보 제공 의무화

녹색기업 평가기관 육성 및 역할 강화

- 녹색기업에 대한 국내 평가기관 육성
 - 세계 3대 녹색기업평가(Rating)기관으로는 미국의 Innovest, 영국의 EIRIS, 스위스의 SAM가 있음
- 신성장기업의 정보 보유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기업 신용정보회사 제공 확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보유한 신성장 분야 산업규모, 특징, 지원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민간 기업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및 공유

34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인적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 전문 인력 양성

- 녹색금융 서비스를 위한 조사, 심사, 투자 등 전문인력 양성
 -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 및 인력 양성
- 녹색금융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
 - 신성장금융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 내실화

녹색금융 소비자 교육

- 금융관련 협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소비자 인식 교육 및 홍보 강화
 - 녹색 성장의 필요
 - 녹색버블, 환경위험 등에 대한 인식 교육

아시아 녹색금융 컨퍼런스 개최

- 정례적인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 컨퍼런스 개최
 - 북미 지역의 "SRI in the Rockies"

35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3. 녹색전문 금융기관의 설립

■ 개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지원에 대한 부담 경감 필요

- 개별 금융기관이 녹색금융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장기투자에 대해 부담을 느낌
-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 녹색전문은행의 설립 검토 필요

- 녹색금융에 대한 종합적 one-stop 서비스 제공
 - 출자기관: 은행, 증권, 보험, 보증기관, 정부 및 민간 금융기관 참여
- 주요 업무
 - 신생 녹색 중소기업 증점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형프로젝트 투자, 녹색도시, water finance, LED 사업 등 대규모 녹색금융이 필요한 경우 녹색전문은행과 기존은행과 공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36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4. 지원제도의 개선

■ 녹색인증 및 세제 지원제도 개선

- 녹색인증대상 기술·사업 범위 확대 필요
 - 환경청의 녹색기술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투자 대상의 외연 확대 필요
- 시중자금의 신성장 분야 유입을 위해 세제 요건 개선
 -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 대상 확대
 - 선대출-후조달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상품 출시 촉진
 -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한 경우 녹색조달을 통한 대출로 인정하고 이후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자금 조달 허용

37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5. 녹색금융상품의 개념 정립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기준 정립

- '녹색'의 개념 정립 필요
 - 에코(Eco), SRI, 그린, 저탄소,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클린·대체에너지, 친환경, 신성장동력 등 다양한 용어의 개념 정립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의 정립 필요
 -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녹색금융상품으로 분류

38

Ⅲ.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6. 녹색금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녹색금융 발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기준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믿음 필요
 - 초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 중장기: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
-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소비자 출현 및 녹색금융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달성시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분야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39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7.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소 필요

- 배출권거래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거래소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총량 제한 배출거래제 도입이전에 실질적인 거래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금융적 시각에 입각 필요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대비하여 금융의 영역으로 접근 필요
 - 탄소배출권 성격에 대한 규제는 금융규제법상 지위 정립 필요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의 효율성, 유동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policy mix 정책 고려
 -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 법인세 경감 혜택 제공
 - 세수 부족분은 일부 탄소배출권을 경매하거나 정부 보유 탄소배출권을 매각하여 보충하는 방식 등을 검토
- 조기에 추진할수록 기업의 부담이 완충된다는 인식 필요
 - 짧은 기간동안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저항이 클 것임

40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 방안

- 우선적으로 탄소배출권 선물 등 관련 신규 파생상품의 상장·거래 허용
-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 매매,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과 연결
 -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회원, 매매,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마련 및 거래 관련 제도 정비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및 제도 도입
 - 자발적 배출권 시범거래 실시
 - 산업계,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초기시장 활성화 유도
- 의무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시범거래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보완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시장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지수 등 다양한 거래 상품 준비

41



III.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배출권거래 활성화 지원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제도 정비
 - 탄소배출권의 금융상품 성격 규정
 - 기업공시, 기업신용평가, 회계 분야 관련 제도 정비
- 탄소배출권 전문 금융기관 및 상품 육성
 - 탄소자산관리(Carbon Asset Management)회사, 배출권 브로커리지 회사 등의 국내 설립 지원 및 육성
 - 지수, 선물, 옵션 등 탄소배출권 파생 금융상품 개발 지원